

대구광역시달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22. 11. 18.

복지문화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안 건 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- 발 의 자: 박왕규 의원 등 6명(장호섭, 박종길, 박정환, 정순옥, 황국주)
- 발의일자: 2022. 11. 04.(금)
- 회부일자: 2022. 11. 04.(금)
- 상정 및 의결: 제293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(2022.11.18.)

2. 개정이유

- 일부 중복 규정된 내용을 정비하고, 발달장애인에 대한 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의 개인정보나 보호자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명시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지원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규정이 중복되어 이를 삭제함(안 제3조)
- 나. 비밀 준수의 의무를 명시함(안 제16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: 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4조, 「장애인복지법」 제85조의2, 「대구광역시달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」
- 비용추계: 미첨부 대상
- 입법예고(2022. 11. 4. ~ 2022. 11. 15.)결과: 의견 없음

5.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

-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중 중복되는 조항을 정비하고, 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4조제1항에 따라 발달장애인에 대한 범죄 예방 등을 위한 대책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
- 중복되는 제13조를 삭제하고, 안 제7조제2항을 개정하여 보조금 지원·관리에 대한 내용을 수정하였으며, 안 제15조에서는 장애인 범죄예방을 위해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에게 비밀 준수의 의무를 명시함.
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85조의2(비밀 누설 등의 금지)에서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 또는 비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·누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
- 이는 소속 공무원과 소속 공무원이었던 사람, 심사 의뢰기관의 종사자 등 직접 정보를 취득·관리하는 사람에게 비밀 누설에 대한 높은 책임을 부과하여, 같은 법 제86조제4항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한 것으로
- 지방자치단체가 발달장애인에 대한 범죄를 예방·근절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자 모두에게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한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는 서로 다른 것으로 판단됨.
- 또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전국 기초자치단체 123개 중 70개(56.9%)에서 이처럼 비밀 준수 규정을 명시함.
- 따라서 일부개정조례안은 중복된 규정을 정비하고,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발달장애인에 대한 범죄예방 및 근절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명시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 없이 규정된 것으로 사료됨.

6. 질의·답변 및 토론 요지: “특이사항 없음”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